# '딥러닝 얼굴인식' 등 안방까지 들어온 '차이나 보안파워'

르포 | '세계 보안 엑스포 2018' 가보니

**대량 정보수집 용이한 中 특성 살려**
**보안기술 발달… 정부가 뒷받침도**
**하이크비전, 딥러닝 안면인식 적용**
**다후아, 전송거리800m까지 늘려**

#. 도로를 찍고 있는 CCTV 영상이 지나가는 차의 종류에서부터 행인의 성별, 입은 옷의 색깔 등까지 분석해준다. '파란 옷을 입은 성인 남자'를 검색하면 입력된 정보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준다. 수집된 정보들은 계속 쌓여 방대한 데이터를 이룬다. 실종 아동이나 범죄자 찾기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모습이 현실이 됐다. 중국 영상보안기업 유니뷰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2018'에서 선보인 기술이다.

총 20개국 500여 보안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 보안 엑스포 2018에서 중국 보안 업체들의 위력이 대단했다.

중국의 3대 영상보안기업 유니뷰, 하이크비전, 다후아가 대규모 부스를 갖추고 보안 기술력을 선보였다.

유니뷰 부스 안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기술 앞에 사람들이 몰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유니뷰 관계자는 "중국에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이 곳곳에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후아는 전송거리의 혁신을 이뤘다. 기존에는 IP카메라에서 녹화기까지 100m 범위에서 전송이 가능했던 것을 800m까지 늘렸다. 이를 통해 전송 거리를 늘리기 위해 설치하던 케이블과 리피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세계 1위' 하이크비전은 얼굴 인식 카메라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다.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해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률은 더 높아진다. 기존의 단순 얼굴인식기술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이다.

그동안 중국 보안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에 뒤처진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과 국가지원을 토대로 연구와 개발을 지속해왔고 지금은 국내 보안업체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월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이크비전은 6년 연속 영상보안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016년 기준 21.4%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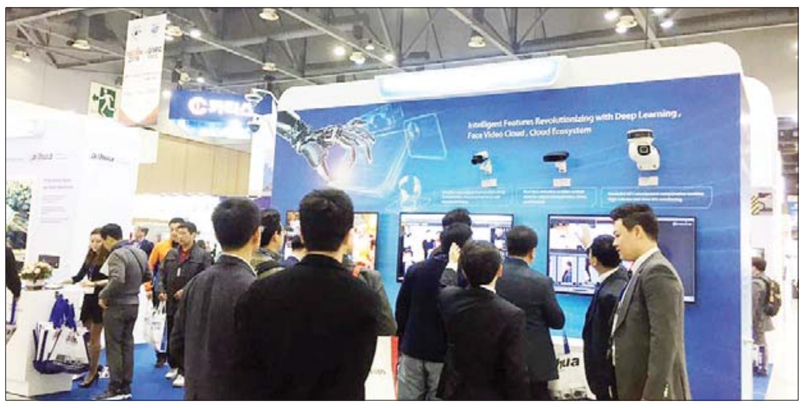
해외 보안 산업지 A&S 인터내셔널 선정 2017년 글로벌 톱50 보안기업에서도 1위에 올랐다. 3위는 다후아가 차지했다. 한국의 한화테크윈은 8위에 자리했다.

한국의 보안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는 업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주력 분야가 달라 한 번에 묶어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기술력을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보안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량의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는 점"이라며 "딥러닝 기술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을 많이 할수록 유리한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가 심한 반면 중국은 인구도 많고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보안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자본력과 인력이 풍부하다. 중국의 보안 업체 하이크비전에는 개발자만 8000여 명 정도 된다"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앞서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기업은 모두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한국의 보안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앞으로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유니뷰는 엔토스정보통신과 국내 총판과 기술제휴 파트너 계약을 맺었고, 통신서비스 제공업체 세종텔레콤은 하이크비전의 국내 총판 사업을 맡고 영상감시 시장에 진출했다. 주연전자는 작년 7월 다후아와 국내 CCTV 시장 진출을 위해 손잡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세계 보안 엑스포 2018'을 찾은 사람들이 중국의 영상보안기업 '다후아'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구서윤 기자

중국의 영상보안기업 '유니뷰'가 '세계 보안 엑스포 2018'에서 CCTV 영상 분석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구서윤기자

## 이명박 구속, 최대 쟁점 '증거인멸 우려'
## 이번주 초에 결단… 영장청구에 무게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여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되지 않은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A4용지 120쪽 분량의 질문 초반에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본인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8일 "질문 분량과 조사 시간을 보면, 이미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액 10만달러(1억700만원) 수수만 인정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이 우려되지만, 구속 영장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 14일 검찰 출석으로 도망할 염려도 없다. 만일 도망 우려가 있다면 출국을 금지하면 된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거운만큼, 전직 대통령의 도망 염려는 없어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의 염려 외에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청구서에 표기할 때는 아마도 증거인멸 염려가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라는 의미"라며 "법리적 다툼에 대해 '이쪽(이 전 대통령) 주장도 말이 된다' 싶으면 불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립인천대 교수인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판사가 볼 때 관련 증거가 많고 명확한데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사안의 중대함'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문총장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문제를 둘러싼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범종기자 joker@

## 명지전문대 男교수 전원 성추문 사실로

**학생들에 강제 키스·안마 지시 등**
**피해자·목격자 등 37명 실태조사**
**교육부, 중징계요구·檢 수사의뢰**

교육부. /메트로신문DB

'미투(#metoo)' 폭로로 성추문에 휩싸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성 교원 전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명지전문대에 대한 3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극영상과 학과장이던 박중현 교수 등 전임교수 3명과, 시간강사·조교 2명 등 총 5명의 남성 교원이 학생들을 상태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제보와 SNS,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난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지난 5일~7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 37명의 공동 진정서를 토대로 진행됐고 추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진단 실태조사 결과 박중현 교수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는 등의 성적 용어를 사용했고, 배우 최용민 교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더니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하려 했다. 이영택 교수는 회식자리에 늦게 온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광옥 강사와 조교 추모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추 씨는 박 교수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박 교수 등 5명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언론 등에 나온 성추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대학측에 박 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청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교수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명지전문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고,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대학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3월 중 구성해 교육분야 전반의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의 모든 불합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해자의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 익산 식품클러스터에 54개社 입주

**풀무원식품도 확정**

전북 익산시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최근 종합식품기업인 '풀무원식품(주)'이 입주를 확정하는 등 분양이 가속화되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풀무원식품㈜이 해외 수출을 전담할 프리미엄급 식품공장설립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신선식품·음료 등 총 70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풀무원식품㈜은 국내 최초로 포장두부와 포장콩나물을 출시하면서 '바른 먹거리' 시장을 선도했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여러나라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또한 올해들어 육가공업체인 (유)빛고운과 ㈜엉터리, 해산물을 가공하는 ㈜나래바이오, 맞춤형 식품을 제조할 누리㈜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분양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국내외 식품기업 54개사 및 소스산업화센터, 영국 캠든 BRI 등 2곳의 연구소를 유치했다.

이들 식품기업 중 16개 기업은 착공, 12개 기업은 준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분양면적 대비 50%이상인 누적 75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다각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